



2008 국감이슈

무엇이 있나?

정세분석 및 전망



한미FTA 국회비준안, 강행 처리 안돼

- 한미FTA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지난 30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국회 일정을 확정하여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자유선진당이 통과에 합의함으로써 최종 표결수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11월 10일 외통위에 비준안이 상정되고 공청회를 거쳐 오는 17일 경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비준안은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우리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켜 미국에 압박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가 당선됨으로써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 쪽으로 무게가 실려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오바마 후보는 자동차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협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민주당은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 대선 등 대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미국측의 변화를 주목해야 하며, 농업 등 대표적인 피해산업의 대책이 부실한 상황에서의 비준안 통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더불어 FTA특위를 제안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에 농민단체들은 정치권 면담을 통해 한미FTA반대 입장 표명,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고 지역 조직을 총 동원해 한나라당과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1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를 통해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비준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과 농민단체의 집회 등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향한 거센 성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11월 25일 전국대회 지역분위기 고조

- 한미FTA 반대! 농축수산인생존권쟁취! 식량주권실현을 위한 전국대회'(이하 전국대회)가 농민 연합을 비롯해 40여 단체들 주관으로 2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농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견을 결집하기 위해 전국대회 추진위를 구성, 도별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대회 성사를 위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4일 충남도를 시작으로 5일 전북도, 6일 경남·북도, 7일 강원도와 충북도 결의대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후 경기도, 전남도 결의대회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결함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 추진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생산비 상승, 한미FTA국회비준 등 농업의 총체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고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위는 정부에 ▲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 ▲쌀직불금 부정수령 고위공직자 파면, 직불금제도 보완▲농업 생산비 안정화 대책 마련 ▲농가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 농민을 위한 농협개혁 단행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 대책 마련 ▲식량주권 실현위한 식량자금률 목표치 법제화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감사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었나?

- 지난 10월 6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쌀 직불금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국을 뒤흔들었다. 이후 국정조사를 이끌어냈고 불법수령자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사퇴가 이어졌다.
- 대부분의 의원들이 직불금 문제를 타겟으로 정부의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시군유통회사를 비롯한 새 정부 사업에 대한 검토 ▲식품안전 일원화 촉구 ▲한미FTA 보완대책 ▲농가부채 해결 촉구 ▲농협개혁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⑤